진정한 핵 한국은 어느 쪽인가?

애덤 마운트(독립연구자), 토비 달튼(카네기국제평화재단)

38선 이남에는 핵무기로 분열된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한다.

첫 번째 한국에서는 정부 관리들이 핵무기 옵션을 지원하는 역량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에는 핵폭탄 연료를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핵작전을 계획하는 군사령부가 포함된다. 이 한국에서는 일부 정치인과 관리들이 언젠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말하는 한편, 다른 이들은 선택지를 열어두기 위해 동조한다. 이러한 정책을 '의도적 헤징(deliberate hedging)'이라 부르기로 한다.

두 번째 한국은 동일한 역량—동일한 핵시설, 잠수함, 지휘 구조—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 한국의 관리들은 이러한 획득이 핵무기 프로그램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대신, 이들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북한에 대한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역량을 추구한다. 이 정책을 '비의도적 무기 역량(inadvertent weapons capability)'이라 부르기로 한다.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sia-Pacific Leadership Network)가 게재한 주목할 만한 기고문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은 두 번째 한국에 대한 강력한 주장을 펼친다. 그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핵무장이나 그에 대한 어떠한 환상이 아니라, 안보, 경제적 강점, 그리고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라는 보다 넓은 토대 위에 있다”고 서술한다. 조 장관은 핵무기 프로그램이 “우리 자신의 강점의 토대를 훼손”할 것이라는 여러 이유를 제시한다. 그는 핵비확산조약(NPT) 준수가 “단순히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적인 전략적 필수 요건”이라고 결론짓는다.

이 글은 핵무기 찬성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 관리가 지금까지 제시한 가장 설득력 있는 반박문이다. 우리가 대화를 나눈 대부분의 전문가와 관리들은 조 장관의 견해에 동의하지만, 공개적으로 그렇게 밝히는 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조 장관의 서면 발언은 동일한 정책과 역량을 가진 두 한국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도적 헤징'과 '비의도적 무기 역량' 모두 핵 잠재력(nuclear latency)의 한 형태로, 이는 정치학자들이 핵무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단기간에 축적했으나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은 국가를 지칭하는 데 사용하는 용어이다. 두 개의 한국의 유일한 차이는 집권 정부의 표명된 의도뿐이다. 핵 잠재력의 문제는 의도가 변할 때 한 국가의 핵 지위 역시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느 한국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과연 차이가 있기나 한 것인가?

조 장관의 기고문은 정부의 비핵화 의도에 관한 성명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 프로그램이 왜 한국의 국가 안보와 번영에 대한 위협인지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정부와 그 후임 정부들이 이 논리를 따른다면, 조 장관의 성명을 토대로 한국이 핵 잠재력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비용에 직면할 위험을 더욱 줄여나가야 한다.

ⓒ EAI 2026

한국 정부는 비핵무장을 유지하는 한국을 위한 지속 가능한 국내 합의를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이 세 번째 한국은 핵 잠재력이라는 불안정한 지위를 탈피하는 대신 '적극적 비확산(active nonproliferation)'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 이 정책은 한국의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들이 핵에너지 산업과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한다는 인식을 전제한다.

이견의 여지가 있지만, 정부가 적극적 비확산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농축 및 재처리 역량 개발과 핵추진 잠수함 계획을 축소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의 미미한 혜택이 그 높은 비용과 위험을 정당화한다고 믿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경력의 상당 부분을 노력해 왔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계속되는 한, 한국 지도자들의 미래 의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은 남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마도 계속될 것이라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한국은 어떻게 핵 잠재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가?

첫째, 정부는 핵무기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여론을 변화시키는 데 헌신해야 한다.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며, 이 설문 결과는 일부 정치인과 핵무기 옹호자들이 자주 인용한다. 이 수치는 북한의 위협과 미국 동맹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지만, 핵 확산의 위험에 대해 함께 질문을 받았을 때는 지지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 수치가 지속되는 한, 미래 정부가 핵무기 개발의 위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세계 각국의 정부와 시장은 한국의 의도에 대해 우려할 것이다.

여론을 전환하기 위해, 주요 민간 및 군사 관리들은 한국의 핵 의도에 관해 국내외 언론을 채우고 있는 모호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한다. 이들은 한국의 탁월한 재래식 전력이 가장 효과적인 억제 형태인 이유, 핵무기 프로그램이 왜 국가에 해가 되는지, 그리고 핵무기 옵션을 열어두는 것이 왜 한국의 상업용 원자력 에너지 목표에 해가 되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해야 한다. 조

ⓒ EAI 2026

장관이 서술하듯, 확산은 “고립의 위험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제재를 불러오며, 한국을 세계적 리더 국가로 만든 국제적 위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는 한국의 비핵무기국 지위를 공고히 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우회하거나 약화시키기 어려울 만큼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핵무기 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개발, 상업적 수요를 초과하는 농축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생산(즉, 비축 금지), 20% U-235 이상의 우라늄 농축,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금속 주조와 같이 정당한 평화적 목적이 없는 핵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여 한국의 기존 핵안전조치 협정을 보강할 새로운 투명성 관련 조치를 개발하고 이행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특히 농축 및 재처리와 같은 가장 민감한 핵 활동을 둘러싼 보다 강력한 비확산 규범을 구축하는 선도적 접근 방식을 개척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의 사례로 광역 환경 감시 체제를 도입하거나, 미신고 핵 활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시범적 특별사찰을 제안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조 장관의 기고문은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한국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핵무기 옵션을 열어두는 것조차 위험하다. 만약 한국의 적대국들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핵 잠재력'은 한국이 억제하고자 하는 분쟁을 의도치 않게 촉발할 수도 있다. 정부는 핵 확산이 초래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비확산의 대담한 정책을 채택하고, 대신 한국의 진정한 안보와 강점에 투자해야 한다. ■

ⓒ EAI 2026

■ 저자: **애덤 마운트**_독립 연구자; **토비 달튼**_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프로그램 선임연구위원 겸 공동 소장.

■ 번역 및 편집: **오인환**_EAI 수석연구원; **이상준**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11) | leesj@eai.or.kr

본 논평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발행일 2026년 5월 21일 979-11-7584-097-3 95340
“진정한 핵 한국은 어느 쪽인가?”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

ⓒ EAI 2026